東洋史敎育의 現況과 活性化

權 錫 奉
(中央大 史學科 敎授)

I

大學에 있어서의 東洋史學敎育에 대하여 언급하려고 한다면 우선 해방 이후의 東洋史學界가 오늘날까지 어떠한 발자취를 남기고 왔는가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學界의 硏究風土와 傾向 및 그 水準은 곧바로 敎育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진정한 東洋史學界의 黎明期는 6·25動亂을 전후한 시기이며, 이 시기에 大學을 졸업하여 大學에 남았거나 軍服을 입었으되 연구를 계속한 분들이 그 주역들이었다. 첫번째로 외국유학을 다녀온 이 분들은 대략 1950年代 중반이후 각 大學 史學科의 少壯氣銳의 교수로서 몇 분 안 되는 중견교수를 도와 후진을 양성하면서 그들의 연구업적을 초창기의 「歷史學報」에 발표하였다. 1950年代말까지 발표된 論文數는 비록 많지 않으나 이 분들의 관심은 주로 唐代 이후로 집중되는 한편 東濱 金庠基교수의 영향과 또한 현실적인 사명감이라는 이중의 바탕위에 韓中關係史에 관심을 보였고, 연구의 성격은 철저한 實證主義를 기초로 하는 아카데미즘을 추구하는 데 특징이 있었다.

1960年代 초반으로부터 중반에 이르는 동안 앞에서 든 黎明期의 주역에 의해 啓導된 後進들이 점차 學界의 新進으로 진출하였고, 이들 두번째 그룹은 역시 외국유학 또는 방문교수나 객원연구원 등을 거쳐 大學의 멤버가 되었다. 이들이 오늘날 각 大學 史學科의 중견교수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특히 1960年代 중반으로부터 후반에 이르는 사이에 東洋史學의 연구와 발전에 획기적인 일이 있었던 바, 그 하나는 韓國史學會(1958年)와 西洋史學會(1958年)의 창립에 이어 1965年에 東洋史學會가 창립되어 회원간의 학문적 유대와 협조를 한층 공고히 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 것이고, 또 하나는 1969年에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 史學科가 東·西洋史學科와 國史學科로 三分되어 各 學科의 독자적인 敎科課程을 마련, 한층 집약적이고 조직적인 교수가 가능해졌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서울大學校의 東洋史學科 分科·獨立은 餘他 大學과 大學人들에게 크나큰 관심과 희망을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의 변화는 획기적인 轉機로 간주되었을 뿐이며, 당시까지의 學界의 실상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1970年 3月 28日에 東洋史學會와 延世大學校 東方學硏究所가 공동주최한 「東洋史硏究의 反省과 課題」라는 主題의 심포지움에서 지금은 故人이 된 尹南漢 교수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즉 "戰後 25年間의 硏究의 總量이 對外的으로는 一個 外

國의 年間量에도 훨씬 미흡하다거나 對內的으로도 韓國史의 成果에 비하여 그 몇 분의 일밖에 못 된다는 量的인 劣勢뿐만 아니라 硏究하는 地域, 時代 및 部門에 있어서도 심한 偏向性을 보이고 있을 뿐더러 體系的 基礎作業이 거의 없으며, 부분적으로는 問題意識의 卽興性이나 作業의 非一貫性 또는 非歷史的 方法마저 露呈되어 많은 質的인 斷層이 있으므로 아직도 우리는 戰前의 東洋史學이나 朝鮮史硏究의 延長線上에서 踏步하는 一面이 없지 않다"라고 밝혔으며, 그렇게 된 原因에 대하여 "이러한 현실은 硏究機關의 組織的 活動이나 다른 學問과의 協同作業이 극히 미미하고 오직 手工業的 個別硏究와 個人的 才能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硏究體制는 史料의 缺乏, 偏在, 硏究費의 貧困 및 政策的 支援이나 考慮의 圈外에 放置됨으로써 강요된 硏究與件의 不在狀態와 有關한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東洋史學硏究」 第5輯, 1971年 3月). 요컨대 東洋史學硏究에 있어서 1970年초라는 시점에서 볼 때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은 硏究者가 처해 있는 硏究與件의 不在에 있다는 지적이었다. 그가 제시한 硏究與件의 不在의 條件에는 異議도 있을 수 있으나 물론 타당한 분석이었으며 따라서 앞에서 든 바와 같이 學會가 창설되고 東洋史學科가 독립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적어도 硏究與件의 不在를 改善할 수 있는 첫째 條件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되었던 것이다.

各 大學에서도 서울大學校의 경우와 같이 東洋史學科의 分立·獨立을 기대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실현되지 않았고, 1970年代 중반에 大學敎育改革案에 따라 韓國史가 法定 敎養必須科目으로 결정된 이후 國史學科만을 신설하거나 東·西洋史學科라는 명분으로 史學科를 잔존시키고 國史學科를 독립시킨 大學도 나타나게 되었다. 동기나 계기는 여하간에 점차 分科現象이 있게 된 것만은 확실한 것 같다.

앞에서 든 바와 같이 1970年代 중반의 韓國史에 대한 政策的인 重視와 地方大學育成策에 따른 史學科의 新設 내지는 定員의 增員, 美·中共간의 외교관계 수립에 따른 中共에 대한 관심의 제고, 海外資料需給의 원활 등과 특히 大學院定員의 대폭적인 增員은 東洋史硏究에 활력을 불어 넣는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결과 1970年代 후반에 이르면 大學人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래의 中國史 중심을 벗어나 東南亞細亞史, 印度史, 中央亞細亞史 및 日本史 등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어 명실상부한 東洋史硏究의 時代가 시작된 것이다. 참고로 歷史學會編 「現代韓國歷史學論著目錄(1945~1980)」에 의거하여 해방이후부터 1980年까지 論文을 발표한 우리나라의 東洋史學분야 大學人의 수를 제시해 보면 論文을 발표한 716명 중 3篇 이상 발표자가 128명이고, 10篇이상 발표자는 31명이다(東洋言語·文字學과 文學史 관계는 除外하였음).

Ⅱ

다음에 東洋史敎育의 現況에 대하여 언급해 보기로 한다. 敎育의 現況은 敎育外的인 條件과 敎育 그 자체인 內的 條件이라는 두 가지 側面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前者에 대하여 언급해 보기로 하자.

첫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人文學 분야를 소홀히 대하고 있는 풍조이다. 물론 상대적인 것이긴 하나 사회가 온통 産業社會로의 邁進을 추구하고 그에 따른 價値體系를 신봉함으로써 人文學 분야는 물론이거니와 自然科學의 경우도 基礎學問 분야는 소외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풍조이다. 우리나라에서 高級人力 즉 고도의 知識과 技術을 지닌 人材를 필요로 하고 더우기 2000年代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때 고도의 技術人은 論外로 하더라도 고도의 知識人은 과연 어떠한 知識을 소유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일까. 歷史學이나 哲學 때로는 心理學, 言語學 등의 知識을 大學敎育이라는 과정을 통해 습득한 知識人을 지칭하지는 않을 것이다. 序列로 보면 商經과 法政의 順位가 명백하고 人文學분야에서도 外國語學系列(外國文學이나 言語學은 除外되어야 하겠지만)만은 例外일 수도 있을 것이다. 즉 고도의 知識人은 産業社會와 有關한 분야에 관계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言必稱 産學 및 精神文

化의 균형있는 발전이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한낱 理論에 불과하다. 史學科에 다니는 學生 중 3學年末이나 4學年初가 되면 거의 과반수 이상이 취직공부를 한다고 商經科目이나 취직영어 과목을 열심히 수강하고 있는 것은 그 단적인 증거이다. 설상가상으로 1981年 이후 大學定員이 대폭 증가하여 많을 경우 1學年이 100여명이 되는 史學科도 있다. 우리나라의 歷史學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이 많은 歷史學徒가 필요한 것도 아니며,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학업을 끝내고 졸업한 다음 그들의 知識을 토대로 하여 社會에 기여하며 또한 개인적으로도 보람을 느끼고 생활의 안정도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學生들 스스로의 人生計劃이 추구되어 결국 史學科에 입학하여 大學이라는 過程만을 밟고 專攻한 學問世界와는 거의 無關한 會社員이 되고 마는 것이다.

둘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歷史學분야에 있어서 東洋史學이나 西洋史學분야 보다도 韓國史學분야에 정책적인 偏頗性이 있다는 사실이다. 서울大學校를 예외로 하고 기타 몇몇 大學에서 國史學科는 獨立되었으나 東·西洋史學科의 分科는 실현되지 않고 그대로 史學科로 되어 있고, 韓國史는 大學의 法定 敎養必須科目으로 지정되었으나 文化史는 選擇科目으로만 남아 있으며, 史學科의 大學院生에게 지급되는 장학금도 韓國史 專攻學生에게 한정하고 있는 점 등이 그 단적인 예이다. 이와 같은 國史學에 대한 政策的인 偏頗性이 왜 있어야 하는가 그 동기나 목적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東·西洋學界가 萎縮되는 데 이와 같은 偏頗性이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敎科課程, 敎科目, 配定時間 등에 관한 것이다. 현재 大學卒業에 필요한 학점은 140학점 이상이고, 履修內容을 보면 敎養必須科目이 36~42학점, 專攻科目 54학점 이상, 敎職科目履修時 16학점, 其他 選擇科目이 28~34학점(副專攻을 이수할 경우 21학점 이상) 등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敎職科目을 이수하는 史學科學生일 경우 選擇科目을 史學科의 敎科目 중에서 선택한다면 88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나 그러한 學生은 극히 드물고 대략 60학점 내외를 이수하고 있다. 60학점은 20科目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國史, 東洋史 및 西洋史의 敎科目을 각기 7과목 정도 이수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各 大學의 敎科課程과 敎科目을 조사해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東洋史敎科目은 8~11과목이다. 서울大學校 東洋史學科는 28과목, 國史學科가 독립된 嶺南大 史學科의 경우는 東·西洋史科目이 각기 14과목으로 역시 많고 西江大學의 경우는 모두 다 개설되는 것은 아니라 생각되나 敎科課程에는 東洋史科目이 32과목이나 設定되어 있다. 이 西江大學의 경우는 例外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대부분의 大學에 있어서 개설된 東洋史 관계 敎科目은 8~11과목으로 科目名稱이나 內容도 거의 비슷하게 設定되어 있다. 즉 時代史, 地域史, 史學史, 史籍解題, 特講, 講說, 演習 및 分科史(예컨대 制度史, 思想史, 社會經濟史 등)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嶺南大學校의 경우 「아시아」라는 科目名稱을 사용하고 있으나 기타 大學에서는 거의가 「東洋」으로 되어 있고 分科史의 경우, 때에 따라서 「中國」이라 지칭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설정된 東洋史관계의 敎科目 중에서 學生들은 7개 과목정도만 履修하면 졸업할 수 있다고 볼 때 과연 史學科學生으로서 東洋史에 관하여 무엇을 알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런지 매우 의심스럽다.

Ⅲ

다음에 東洋史敎育의 內的 條件인 敎育 그 自體에 대하여 언급해 보기로 한다.

첫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各 大學의 敎授構成과 이른바 學風問題이다. 우리나라의 東洋史學 분야의 大學人數가 많지 않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현재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각 대학의 東洋史 관계 敎授는 두 명 정도 在職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한 大學에 있는 두 사람의 東洋史 敎授가 적어도 같은 時代硏究者는 아니겠지만 전체 敎科目을 두 사람이 책임지고 있는 현실 때문에 無理가 따르고 있다고 판단된다. 예컨대 分科史를 개설할

경우 더욱 그러하다. 이 경우 매학기마다 그 분야의 專攻要員을 招聘하는 것이 最善의 길이지만 이른바 專任敎授의 責任時間이 있기 때문에 招聘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4,5年간 他大學에 출강 나가는 敎授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각 대학의 史學科간의 교류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 결과 각 대학의 東洋史 敎授의 개인적인 學問의 領域이나 性格이 곧 그 大學 史學科의 東洋史學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현상이 농후하게 된다. 언뜻 보기에는 하나의 學風과도 같으나 결코 學風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된다. 學風이란 硏究領域이나 硏究方法 또는 理論에 있어서 學界의 한 분야를 대표하고 이끌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각 대학 史學科에는 아직껏 學風이 缺如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歷史解釋에 관한 問題이다. 歷史解釋에 관한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提起되고 있는 바 그 하나는 歷史 事實을 實證的으로 보려고 하는, 즉 "存在로서의 歷史"로 보아야 하는가 또는 敎訓的 혹은 實用的으로 보려고 하는, 즉 "意味로서의 歷史"로 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며, 또 다른 하나는 唯物史觀에 의한 解釋의 문제이다. 특히 後者의 경우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예를 들면 中國 古代社會에 있어서의 奴隸制問題는 물론이거니와 資本主義 萌芽期問題, 近代化問題 등이 그것이며 특히 19世紀 중반의 列强關係와 太平天國, 義和團運動의 性格問題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解釋의 문제는 中共史學界의 硏究成果가 日本史學界의 그것과 함께 日本으로부터 알려짐으로써 더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하겠다.

Ⅳ

이상에서 우리나라의 東洋史學界의 모습과 大學에 있어서의 東洋史敎育의 現況에 대하여 간략하게 언급해 보았다. 무엇이 문제인가는 이미 지적되었다고 생각되나 學界의 발전과 敎育의 활력을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 정책적인 단안이나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것 같다.

첫째, 서울大學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東洋史學科의 分科, 獨立이 바람직하다. 學問의 細分化 경향을 감안해서도 그러하고 특히 專門家를 양성하려면 더욱 그 필요성이 절감된다. 그리고 定員問題는 서울大學校의 10명을 감안하여 15명 내지 20명 정도이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專任敎授의 수도 최저 5명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흔히 大學敎育課程이 專門人의 養成이냐 또는 敎養人의 養成이냐 하는 論議를 듣고 있는 바, 筆者의 견해는 철저한 아카데미즘에 입각하여 前者의 주장이다. 따라서 大學敎育課程에서 專門人이 될 수 있는 基礎 資質을 완전히 갖추어야 할 것이다.

둘째, 大學院敎育의 强化問題이다. 물론 현재 文敎當局이나 各 大學에서 이 문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고는 있다. 그러나 量的인 팽창이나 制度的인 까다로움이 곧바로 敎育에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量的인 팽창은 무모한 高級學歷者의 量産을 초래하여 社會의 크나큰 손실과 浪費를 낳게 할 우려가 있음은 明白하다. 결국 敎育 그 자체가 문제인데 大學院 專任敎授가 한 사람도 없는 실정에서 결국 마지막 敎育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現職敎授들이다. 大學院敎育은 專門人 養成의 要式過程이 아니라 진정한 專門人만이 學位를 취득하여 學界와 專門敎授의 中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바람직스러운 것은 歷史學을 소중히 여기는 硏究機關이 많아지고 또한 文化創造의 各級組織이나 심지어 産業機關에 이르기까지 歷史에 대한 知識은 물론 분석, 정리 및 歷史的 再構成의 필요를 느끼게 될 때 大學에 있어서의 東洋史敎育은 물론 學界의 발전이 이에 의해 이룩될 것이다. *